

“정부 일방적 추진에 최악 상황 치달을 것...책임져야”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광주시·전남도의사회 “피해는 결국 국민들 몫” 비판 전남대·조선대 의대 교수들 사직 등 집단행동 고심

정부가 20일 오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2천명 증원에 대한 대학별 배분 결과를 발표하자 광주·전남지역 의료계가 즉각 반발했다.

정부는 전남대 의대 입학 정원을 기존보다 75명 늘어난 200명으로, 조선대의대는 125명에서 25명 증가한 150명으로 확정했다.

이와 관련 박유환 광주시의사회장은 “정부는 시종일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일방적이고 무리하게 추진했다. 끝내 대화하지 않겠다고 하니 더 이상 논

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음 달 취임하는 최정섭 제38대 광주시의사회장 당선인은 “의대 정원은 지역 주민을 최우선으로 해 다각적으로 고심해야 할 일”이라고 전제한 뒤

“현재 서울·경기지역 이른바 ‘빅5’로 불리는 대형병원들의 분원 건립이 허가돼 있어 향후 그 분원들로 지역 인재들의 유출 가능성이 있다”며 “인구는 감소하는데 의료인이 늘어나면 과다 경쟁이 발생하고 이는 의료비 상승으

로 이어져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떠안아야 한다”고 협의 없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해 꼬집었다.

최운창 전남도의사회장 역시 “오늘 발표로서 의대 정원 증원 추진은 확정적인 사실로 굳어졌다. 결국 집단이탈 전공의들은 더이상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제자를 지키지 못한 교수들도 죄책감에 사직 행렬에 동참할 것이다.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며 “사태를 이렇게까지 만든 정부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대·조선대 의대 교수들도 오는 25일로 예고된 전국 의대 교수 사직 행렬에 동참할 지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대는 당초 이번 주중 비대위 구성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

한 설문조사를 추진하려 했으나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

조선대는 지난 16일 교수진 150여명 중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사결정기구인 교수평의회를 비대위 체제로 전환, 집단 사직 동참 등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학교 측이 신청한 증원 규모보다 적은 수가 배분되면서 전국 분위기를 주시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해당 대학의 일부 겸직교수들이 사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해당 교수들은 진료는 차질 없이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조선대 관계자는 “오는 25일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과 관련해서는 지역 의대 교수들이 전국비대위 상황에 맞춰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기수화·김다이 기자

광주시의사회, 최정섭 제38대 회장 선출

조승열 대의원회 의장도...임기는 내달부터 2027년 3월까지

광주시의사회는 20일 “전날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해 제38대 집행부로 최정섭 회장과 조승열 의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치열한 경선을 치른 신임 최 회장과 조 의장은 대의원 200여명이 참여한 투표로 당선됐다. 임기는 오는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 3년이다.

최정섭 회장은 “회원들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더불어 회원들의 자존심과 권익을 위해 투쟁에 앞장서고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며 투쟁 의지를 분명히 했다.



최정섭



조승열

시의사회 대의원을 대표하는 조승열 의장은 “시의사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권 쟁취와 회원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수회 기자

생후 7개월 아들 죽인 친모 재판서 심신미약 주장

범행 뒤 극단 시도했다가 회복...“산후우울증 앓아”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뒤 극단 시도를 했던 30대 친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시인하면서도 산후우울증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7월17일 오후 3시30분

께 광주 북구의 아파트 6층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극단 시도를 했으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회복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2022년 12월 아들을 출산한 직후 극심한 우울증을 겪다가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안재영 기자

이날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해 A씨의 법률 대리인은 모두 인정했으나 극심한 산후우울증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벌인 범행임을 인정해달라고 변론했다.

재판장은 A씨의 정신과 진료 기록 등에 대한 사실 조화와 가족 대상 증인 신문 등을 거쳐 심리하기로 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5월10일 오후 2시 열린다. /안재영 기자

전국 돌며 노인 상대 수천만원 흥친 50대 여성 구속

전국을 돌며 노인을 상대로 수천만원을 흥친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20일 화순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절도) 혐의로 A(50대·여)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3일 오후 5시30분

께 화순군 이양면 한 버스 정류장에서 B(80대·여)씨의 귀중품이 든 가방을 훔쳐 달아나는 등 8·11월 전국 각지에서 12차례에 걸쳐 노인들을 상대로 2천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흥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개

월여추적 끝에 지난 13일 목포종합버스터미널 인근 모텔에서 A씨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동종전과로만 기출소해 누범기간 중 생활비를 마련하고 자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동종범죄 전력과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4일 신청, 발부 받았다. /화순=이병철 기자

‘가족수당 10여년간 부당 수령’市 공무원 ‘정직 1개월’

남편과의 이혼 사실을 숨기고 10여년간 가족수당을 부당 수령한 광주시 소속 공무원이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인사위원회는 최근 감사위원회로부터 중징계 요구

를 받은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 A(5급)씨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

A씨는 10년 전 이혼했는데도 지난해 말까지 배우자 분 가족 수당과 복지 포인트를 합쳐 700여만원 상당을 부당 수

령한 것으로 감사에서 드러났다.

다만 환수 시효가 5년이어서 광주시는 해당 기간 부당 수령한 200여만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말 단행된 인사에서 승진 대상자에 포함됐지만, 이번 일로 인해 승진을 취소할지 조만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박선경 기자



불법이륜차 합동단속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과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합동단속이 20일 광주 광산구 월계동 도로에서 실시된 가운데 관계자들이 오토바이를 대상으로 소음과 불법 개조 등을 단속하고 있다. 이날 합동단속에는 광주경찰청과 광주자치경찰위원회, 광산구청, 교통안전공단 등이 참여했다. /김애리 기자

광주 동구 학동 야산 불...3천500㎡ 소실

광주 동구 학동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나 3천500㎡(1천여평) 가량이 소실됐으며, 대당 인근 주민 6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0일 동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9분께 광주 동구 학동 미양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소방차 37대, 헬기 4대(소방·경찰·산림청), 소

방대원 235명을 투입, 신고 접수 2시간 30여분 만인 오후 3시30분께 완진했으나 이로 인해 3천500㎡가 소실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불이 난 곳과 민가가 인접해 있어 소방 당국은 민가로 불길이 번지지 않도록 감초를 차단하고 인근 주민 6명을 대피시켰다.

관할 자치구인 동구청은 화재 발생

즉시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 인근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을 내렸고 공무원 200여명을 현장에 투입해 잔불 진화 작업을 도왔다.

경찰은 해당 산 바로 옆에 위치한 빌라 3층에 거주하고 있던 A씨가 창문을 열고 쓰레기를 태우던 중 불어온 바람으로 인해 불씨가 산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 혐의가 입증되면 A씨를 입건할 예정이다.

한편 소방 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정은정 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제사나라 www.jesanara.com

전통 제사음식의 명가

안전기원제 고사

시 제 상

제 사 상

고 사 상

문의. 062)527-0044/010-9970-2278

자매회사: 국제의식산업(주) 출장부페